

(붙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요약

I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1월 20일 ~ 11월 21일(2일 간)
- 표 본 수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 표본오차 $\pm 3.1\%$ (신뢰수준 95%)
- 조사방법 :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II 조사 내용

- 범죄수사 관련 통신감청 인식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식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인구 통계
 - 지역: 전국 7개 권역 구분(①서울, ②경기·인천, ③대전·충청·세종, ④강원, ⑤부산·울산·경남, ⑥대구·경북, ⑦광주·전라·제주
 - 연령: 5개(19세 이상~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성: 2개 (남성과 여성)

III 조사 결과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미비로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미인지 의견이 61.5%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지 의견은 38.5%에 불과함.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23.0%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 필요 68.6% vs 중대범죄라도 감청불가 16.6%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6.9%)과 부산·울산·경남(75.1%)에서 70%를 넘었고, 연령별로는 50대(79.0%)와 30대(78.1%)에서 70%대로 높게 나타남. 반면,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하다'는 의견은 서울(22.7%)과 20대와 40대(25.7%)에서 높게 조사됨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벌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4.0%,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0%로 나타나, 벌금 부과 의견이 벌금 미부과 의견보다 29.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은 21.0%
- 모든 계층에서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67.3%), 부산·울산·경남(57.6%), 경기·인천(53.9%)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64.0%)에서 60%이상으로 가장 높음. 반면,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35.8%)과 20대(41.9%)에서 가장 높게 조사됨

○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중대범죄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SNS와 휴대폰 감청허가를 받았으나,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가 없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9%로 조사된 반면,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 19.0%로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임. '잘 모름'은 16.1%
- 모든 계층에서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를 갖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6%)과 부산·울산·경남(70.7%)에서 70%대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79.0%)와 60세 이상(75.9%)에서 높은 의견을 나타냄. 반면, 갖추 필요 없다는 의견은 서울(24.9%)과 대구·경북(23.8%), 20대(32.4%)에서 높게 조사됨

○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감청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6%로 조사된 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에 그쳐 2배가량의 의견 차이를 보임. '잘 모름'은 11.3%
- 모든 계층에서 과반인 50%이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특히 대전·충청·세종(76.5%)에서 70%이상으로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78.9%)와 60세 이상(77.1%)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기·인천(30.3%)와 40대(3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최근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대범죄 혐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휴대전화 감청 관련 법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 의견이 40.0%로 가장 높고, 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29.4%)',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 됨(18.6%)' 순으로 나타남. '잘 모름'은 12.0%
-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57.4%)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가장 높고, 이어 서울(42.5%), 부산·울산·경남(40.2%)에서 40%대로 높음.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외국인만을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우세함. 연령별로는 내/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48.4%)에서 가장 높은 반면, 외국인만 대상으로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34.3%)와 40대(33.4%) 가장 우세함